

새 시대 국가지표는 민주복지

문화방송·경향신문 사장과의 특별회견

1980년 8월 11일

-오늘의 구국과업이 이 나라 살리는 마지막 기회-

질문 : 국보위가 발족된 이후 괄목할 만한 사회개혁 작업의 전개로 새로운 시대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동안 국보위를 만들고 맡으셔서 노고가 크신 전위원장께서는 새 시대를 영도해야 할 역사적 책무를 종건 싫건간에 맡으셔야 할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전장군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관심이 매우 큰 줄로 압니다. 먼저 새 시대로 이어질 80년대에 예상되는 국내외정세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떠 맡겨 질 과제는 어떤 것인지요?

답변 : 80년대가 시작된 이 시점에서 오늘의 상황전개가 뜻하는 80년대의 역사적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난 70년대에는 그 동안 국제정치와 세계경제를 지탱해 오던 체제와 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70년대는 전후 질서의 붕괴라고까지 일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70년대에 일어났던 오일쇼크의 연속이나 세계경제의 불황, 그리고 국제정치의 격변 등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국제환경의 커다란 변화 속에서 우리 나라도 엄청난 시련을 겪었으며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70년대는 하나의 민족사적 분수령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0·26사태」를 고비로 70년대가 한 시대적 마무리를 지었다고 보아집니다.

이렇게 볼 때 80년대의 세계환경이나 우리 나라의 조건은 많은 변화가 예견되며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80년대는 어떤 의미에서 70년대보다 더욱 격동하게 될 것이고 70년대와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리라고 보입니다. 70년대가 이른바 전후체제의 전면적인 붕괴라고 인식된다면 80년대는 새로운 질서의 모색 내지 구축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국제정치 질서와 세계경제 체제가 모색되고 구축되는 양상이 80년대의 격변 속에서 특징적으로 부각되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질서와 체제를 모색하는 시기에는 더욱 많은 위기가 겹들인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세력 쟁탈전이 곳곳에서 전쟁의 위기를 가중시킬 것이며, 국제정치에 여러 가지 마찰적 요인을 증대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도 근본적인 구조변동과 새 질서 모색의 엄청난 진통을 예상케 해 줍니다.

사실상 중동을 에워싼 미·소의 각축이나 「아프간」 사태, 그리고 극동에 있어서의 소 군사력 강화 등은 심각한 위기적 양상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80년대는 미·중공·일본관계에 있어서의 신시대의 전개로 특징지워질 가능성

마저 커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것은 결국 80년대의 우리의 주변 환경에 일대 변화가 휘몰아쳐 오리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는 북괴의 위협을 받고 있는 특수한 안보상황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국제적 조건이 크게 바뀌고 안보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고 장래를 기약하기 위해서는 매우 비장한 각오와 국민적인 단합이 요구된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현실도 80년대는 70년대와 다른 새 시대가 될 것입니다. 80년대에는 새 질서가 수립될 것이고 새로운 국가지도이념이 요청되며 새로운 민족사적 전개가 예견됩니다. 국내외적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물론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기필코 새 역사새 사회를 창조하겠다는 국민의 단합된 의지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으며 복된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질문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내외정세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국가적이고 국민적인 의지를 모아 극복해야 할 줄 압니다.

국가적인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 우리 나라가 나가야 할 방향과 지표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 한 마디로 민주복지국가의 건설이 새 시대의 국가지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복지국가 건설이란 말이 약간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나 우리의 새 시대가 이룩해야 할 방향은 그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첫째, 민주정치를 이 땅에 토착화하자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입니다. 그 가치의 구현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겠지요. 그러나, 그 가치의 구현방법이 시공을 초월해서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가 문화적 배경을 이루고 있고 연면한 민주정치의 전통을 가진 서구사회와 그와는 전혀 다른 문화전통을 가진 동양사회에서 동일한 내용의 민주정치가 성숙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서구사회에서 성숙된 민주정치를 그대로 동양사회에 이식시켰을 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뿌리를 내리지 못한 모방된 민주정치는 그 사회가 요구하는 진정한 요구를 해결하는 데에는 무력하기 짝이 없고 사회적 혼란과 빈곤, 그리고 정체만을 자초하고 말 뿐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에서는 우리의 정치풍토에 뿌리내릴 민주정치를 창조하고 개화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비록 서구사회에서라 할지라도 자기만이 민주주의자이고 자기의 주장만이 옳다는 절대윤리는 용납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점에서도 우리 사회에서는 왕왕 제대로 민주주의를 소화시키지도 못한 극단적 민주론자나 교조주의자들이 서구식 정치만이 절대 진리라고 고집함으로써 민주정치의 토착화를 저해해 왔습니다.

비단 정치뿐 아니라 문화일반에 있어서도 우리는 무조건 서구 것을 모방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으로 소화하고 여과해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결코 배타적 의미에서가 아니라 올바른 민족자존의 의지에서 마땅히 그러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토착화하려는 우리의 민족의지는 공산주의를 극복하는 민족통일일로 이어져야 합니다. 분단 35년간 북한공산집단에 의해 민족이질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은 가슴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땅에서 동족상잔의 전쟁을 막아야 하고, 그러면서 민주적 통일한국을 이룩하기 위해 우리의 민족의지는

끈질긴 인내 속에서 평화적인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고 번영되고 평화로운 통일조국을 이룩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본격적인 복지시책을 펴 진정한 복지국가를 건설해야겠다는 것입니다. 80년대에 들어와서도 자주국방·자립경제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성장을 계속 추구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양적인 성장의 그늘에 국민생활의 질적인 향상이 언제까지나 밀려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의료보험의 전면 실시·노후부양·실업보험 등 본격적인 복지시책이 80년대에는 시행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사회에서는 개발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다 같이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장의 열매가 일부층에 편재하고 상당의 국민이 성장의 그늘 속에 방치될 때 국민간의 일체감은 조성될 수 없으며, 그러한 사회는 사회복지가 구현된 건전한 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도 국민 모두가 개발 혜택을 고루 누려 상호신뢰가 생기고 계층간에 위화감이 존재하지 않는 진정한 국민통합의 사회를 이룩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복은 우리 체제의 허를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복지사회의 실현은 안보적인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세째는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정의사회란 한마디로 정당한 노력에 대해 정당한 대가가 치러지는 그런 사회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정직하고 성실하며 근면한 사람이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대우받는 그런 사회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불의에 의해 쫓기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처럼 취급되는 그런 사회에서는 민족의 생기와 국가의 발전이 기대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물량적인 성장에 휩쓸린 나머지 우리 고유의 미풍량속이나 도덕적 존엄성이 퇴색하고 물질위주의 가치관이 팽배하는가 하면 그 그늘 속에서 부정과 불의와 부패와 불신이 싹트고 심화되어 갔습니다. 이런 부정·불의·부패를 추방하지 않고는 80년대에 있어 올바른 민족정기를 고양하고 통일에의 의지를 구체화할 수 없으며 진정한 복지사회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회개혁 작업도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치작업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사회의 구현은 달리 말하면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를 되살리고 새로운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도덕적 윤리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민주주의가 토착화되고 고도의 복지시책이 실시되는 정의사회의 구현은 80년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 : 소상하게 말씀하신 국가지표 가운데서도 당장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민주정치의 질서가 어떤 방향으로 잡혀 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민주정치의 토착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헌 작업에 따라 골격이 잡힐 새로운 정치질서는 어떤 것이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답변 : 새로운 정치질서를 구축함에 있어서는 「10·26사태」 이후의 여러 현상들이 커다란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력 중심이 공동화하자 이 나라는 하루아침에 끈 떨어진 연같은 꼴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엘리트층으로 자리가 잡힌 것같이 보이던 관의 기강은 무너지고 사회각계에 정착된 것으로 여겼던 새마을운동도 정체상태에 빠져버

렸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기적의 성장이라고 칭송받던 경제마저 불과 몇 개월만에 마이너스성장으로까지 후퇴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사회의 모든 기능은 정체되고 활개 치는 건 선동정치인들 뿐이었습니다. 강한 지도력의 응집이 없이는 이 나라의 모든 기능이 수십년 후퇴해버릴 우려마저 있었습니다. 한때는 새로운 정치질서로서 내각책임제다, 이원집정부제다 하는 논의들이 있었습니까마는 결국 이 나라의 국민적 통합과 사회안정 그리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대통령중심제가 가장 바람직한 체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비단 「10·26사태」 이후의 교훈이 아니라 해도 남북이 사생의 대결을 하고 있는 분단상황은 우리가 어떤 정치질서를 가져야 하는지를 분명히 해 주고 있습니다. 북의 호전적인 집단과 대결해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남쪽이 하나로 똘똘 뭉쳐도 어려운 형편인데, 오히려 힘을 분산시켜 책임의 소재를 모호하게 한다거나 상호 견제토록 해서 제대로 힘을 모으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오늘의 안보상황을 외면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의원내각제는 안정된 바탕 위의 책임정치를 기할 수가 없고, 이원집정부제는 권력의 이원화로 자칫 혼란만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정치질서를 택하든간에 가장 절대적인 명제는 과거와 같은 정치풍토를 다시 재연시키지는 말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정권욕에 사로잡힌 정파들끼리 정쟁만을 일삼고, 그래서 국력을 소모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작태는 국민들이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선거 때마다 대중을 무책임하게 선동하여 국론분열은 물론 국가의 안정바탕까지 뒤흔드는 위험한 사태를 야기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자금이 살포돼 인플레이션을 가중시켜 국가경제에 커다란 주름살을 가져다 주었고 선거민을 매수하는 부정·타락선거가 무수히 자행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정치질서를 형성함에 있어서 이같은 정치풍토의 재연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선거제도를 마련함에 있어 이 점이 가장 우선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대통령 선거에서도 국론분열과 타락을 방지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크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에서 이같은 정치풍토 시정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국민의사를 어떻게하면 최대한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선거는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국론분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간선제도 검토되는 모양입니다만, 그 간선제가 종전의 국민회의에서의 선출방식처럼 특정후보에 대한 신임투표 같은 것이어서는 국민의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 부작용을 봉쇄하기 위해서 직선을 피한다고 할 경우에는 여러 후보가 자유롭게 경쟁함으로써 국민의사가 제대로 선거 결과에 반영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국회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종전처럼 직업정치인들이 횡행하는 정치질서는 지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뿌리고 원내에 들어와서는 그 자금을 회수하고 새로운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갖은 비리를 일삼는 정치풍토가 지속되어서는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가 이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직업정치인이 판을 치지 못하게 되고 철저한 공영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들이 국민의사를 제대로 여과하고 국정을 심의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 새로운 시대를 맞아 과거의 전통이나 비리를 반성하고 새 정치질서를 창출해야 한다는 사실은 국민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서 10월말 개헌안 국민투표, 내년 봄 선거, 6월 이전 새 정부수립이라는 정치일정을 발표하고 약속했습니다. 그 후 내외정세가 많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종래의 정치일정에는 변동이 없는지요?

답변 : 이미 대통령 각하께서 밝히신 정치일정을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일정은 상황의 전개에 따라 오히려 앞당겨질 수도 있는 문제지요. 지금 국보위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정화 작업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고 있어 사회의 안정기반이 빨리 조성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정치일정을 빨리 추진하는 데 고무적인 일이지요. 사실 국가안보나 경제발전이나 여타 모든 점을 위해서도 과도기적 상황은 빨리 극복될 수록 좋은 것입니다.

질문 : 「10·26사태」 이후 한때 국가의 중추가 무너져 사회가 혼돈되고 안보마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국보위가 발족돼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그 동안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국보위의 활동 방향과 발족 동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 「10·26사태」 이후 국가권력의 중추가 무너지자 국가는 침몰의 위기에까지 다다랐습니다. 치안질서는 문란해지고 경제는 정체상태에 빠졌으며 국가기능이 마비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급기야는 국기마저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판을 치는 건 선동 정치인들의 구호와 이에 부화뇌동한 학생들의 소요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국보위는 구국의 신념으로 발족되었으며, 지난 2개월간 그같은 신념하에서 과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흐트러진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사회 도처에 뿌리박힌 비리와 부패를 도려내기 시작했습니다.

국보위가 활동한 이후 사회는 급속히 안정을 되찾아 왔으며 적체되어 온 비리도 씻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숙정작업을 필두로 각계가 자율적으로 정화작업을 전개하고 있어 새 시대의 기풍이 사회 각층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보위는 앞으로도 사회개혁의 의지로 과업을 계속 수행해서 새 시대의 새 기풍을 정착시켜 나갈 작정입니다.

질문 : 국민적인 관심 아래 추진돼 온 국보위의 사회개혁 작업은 권력형부조리 척결, 공무원 숙정, 과열과외 추방 등 과단성있는 시책들이 발표됨으로써 차차 뿌리를 내려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지방을 필두로 해서 범국민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회개혁 및 정화작업의 앞으로의 방향을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 80년대의 새 시대에는 국민 모두가 납득하고 동참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러자면 그동안 적체된 모든 부조리를 일소하고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심어 온 사회질서를 개혁해야 합니다. 전국 30여년 동안 이 사회는 여러 가지 비리와 부정이 도처에 쌓였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급성장 기간 중 여러 고질적 부조리가 부산물로 생겨났습니다. 이른바 권력형 부정축제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지요. 권좌에 오르면 그 자리를 이용, 수십억 내지 수백억원의 재산을 모으는 비리를 서슴없이 저지를 때 국민들은 어떻게 그것을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회기강이 무너지고 국민의 일체감이 저해됐던 것입니다. 부정과 비위가 독버섯처럼 사

회 도처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같은 부조리와 부패를 그대로 방치하고는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내부의 위화와 갈등으로 인해 국가기본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 나라를 건설하는 각오로 이 모든 비리를 삼제하기 위한 일대 사회개혁을 단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특정 정파나 특정 계층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정의가 구현되는 깨끗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직자 사회에서 불붙은 정화작업이 사회각계로 번지고 있는 것은 이 사회개혁에 국민 각계의 호응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증좌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사회개혁은 일시의 극적인 조치나 운동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꾸준히 전개되어 국민들의 의식구조 자체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정신폭토가 쇄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도 이 개혁과 정화작업을 앞으로 계속할 것이며, 모든 국민이 일체감을 갖는 새 시대의 윤리적 기반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 우리 경제는 과거 석유파동 등으로 어려운 고비를 겪어 왔습니다만 특히 「10·26사태」 후 국가권력의 중추가 무너져 사회불안까지 조성되면서부터 더욱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를 건설해서 복지국가를 건설해야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나라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답변 : 우리 경제에는 지금 많은 문제가 있다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 문제, 불황문제, 국제수지 문제 등 매우 심각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게다가 국제경제 환경도 날로 악화되고 있어서 우리의 경제문제를 더욱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원유가 상승은 우리에게 커다란 부담을 안겨 주고 있으며 세계 불황과 각국의 수입규제는 우리의 수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적으로 인플레이와 불황을 동시에 겪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경제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단시일 안에 다시 힘찬 성장궤도에 진입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한국경제의 힘을 얕잡아 보거나 한국 국민의 능력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경제가 그동안 성장해 온 것은 결코 국제환경이나 우리의 조건이 좋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그에 대한 대가로 얻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그렇게 어려운 지경에 빠졌는지 우리 국민과 기업인들은 모두가 자성해 볼 필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커다란 반성과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이켜 볼때 우리 나라의 비약적인 경제성장은 정치안정과 사회안정의 전제조건에 의한 산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성장이 되면 그것이 정치안정과 사회안정에 기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정치안정과 사회안정의 보장없이 경제가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나라의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의 경제발전 경험이 가르쳐 주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경제성장을 누리고 있는 나라, 경제안정을 누리고 있는 나라 쳐놓고 정치사회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도 「10·26사태」를 고비로 정치안정이 무너지자 사회불안을 가져왔고 그것이 경제불황의 악순환을 가중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사회 불안에 의한 경제불안은 이제 해소될 단계에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러한 불안요인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정치 안정기반을 굳건히 함으로써 경제의 비약적

성장을 지속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나는 역사적 관점에서 우리 경제가 계속 성장단계에 있으며 선진경제로의 성숙단계에 접근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80년대에 또 한번의 비약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비약은 곧 우리 경제의 선진국권에의 진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극적이고 비관적인 생각, 그리고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고방식은 떨쳐버려야 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갖고 현재의 역사적 도전에 국민 전체가 단결하여 노력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80년대의 우리 경제를 새로운 단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우리의 새로운 구상과 새로운 획기적 계획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민주복지국가의 건설이란 목표에 부합되도록 마련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질문 :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입니다만 새로운 역사창조의 단계에 있어서는 누구나 동참해야 하며, 특히 지식인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까. 새 시대·새 역사를 창조하는 이 시점에 언론인, 문화인, 학자들의 역할이 어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답변 : 언론인을 비롯한 지식인들은 국가사회를 지탱하는 지주의 하나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식인들의 몰지각한 비판행위가 국론분열의 큰 요인이 되어 왔음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동안 불순한 정치목적을 가지고 반국가적 정치인과 결탁했던 일부 지식인들은 차제에 책임을 느끼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회적 병리현상에 대한 비판은 지식인들의 주요 기능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비판은 어디까지나 국가적 현실에 바탕을 둔 건설적인 것이어야지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파괴행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일제식민통치하에 있을 때 우리 지식인들의 저항과 비판활동은 이민족의 지배체제를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독립주권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의 지식인들의 비판활동은 그 성격이 달라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적 단합과 사회안정의 큰 테두리 안에서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한 비판이어야지 국론을 분열시키거나 체제 자체를 부인하는 반국가적인 것이 되어서는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월남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지 않았습니까. 학생, 종교인, 언론인들이 국적을 상실한 맹목적 비판으로 치달을 때 결국 국가의 침몰을 재촉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공산치하에서 무슨 비판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허점만을 노려 호시탐탐하고 있는 북한공산집단의 위협 아래 있는 우리 실정이 결코 월남과 동떨어진 상황이라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건재할 때 지식인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우리 지식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역사적 상황을 정확히 인식해 달라는 점입니다. 우리 민족은 근대화의 전환기에 국권을 빼앗겨 근대국가를 수립할 기회를 상실했던 것입니다. 그 후 우리는 식민지 36년을 보냈고 해방 후 건국을 했으나 명목상의 독립이었을 뿐이고 명실상부한 민족국가의 건설은 지금도 진행중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남이 한 세기를 통해 이룩하게 되는 근대국가의 건설이 우리의 경우 30여년간의 짧은 기간에 완성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지식인들도 역사적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여 민주국가 건설에 동참해야 할 것이며, 조국에 대한 비판만을 일삼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질문 : 오랜 시간 동안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당면한 과제들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국의 대역사가 추진되고 있고, 또 이를 주도하고 계시는 전장군께서 이 기회에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답변 : 이 기회를 통하여 국민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이 구국과업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만일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 민족은 또다시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악순환만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